

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

#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3년 3월 보도자료([http://www.mohw.go.kr/front\\_new/al/sal/0301ls.jsp?PAR\\_MENU\\_ID=048&MENU\\_ID=0403]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

### I

####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(民)·관(官)이 함께 뚝다.

- 국립재활원, 장애인 게임 접근성 증진을 위해 민·관 업무협약 체결 -

- 국립재활원(원장 강윤규)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\*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, 카카오게임즈,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16일(목) 카카오게임즈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)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.

\* 게임 접근성(Game Accessibility):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

-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협약 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.

- 장애인을 위한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, 환경적 고립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

- 이번에 제공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▲보조기기 입력장치(키보드, 마우스, 스위치 등 PC, 태블릿, 휴대폰 연동 기기) ▲보조기기 보조장치(팔받침대, 거치대, 액세서리 등 기기 사용 보조) ▲자세 유지장치(책상, 의자, 랩보드, 벨터 등 기기 사용을 위한 자세 보조) 등이 포함된다.

-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보조공학전문가의 교육, 보조기기 유효성 검사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질 계획이다.

- 아름다운재단은 사업 총괄을 맡아 지원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, 카카오게임즈는 1억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게임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.
  -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및 사례관리와 연구를 수행하고, 국립재활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자문 및 보조기기 오픈소스를 제공하기로 했다.
-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보조기기가 필요하며,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에게 게임보조기기를 지원한 첫 사례이다.
-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도 가족, 친구와 함께 차별 없이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게임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.
- 국립재활원은 2021년 「같이게임, 가치게임」 프로젝트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등이 함께 게임보조기와 활용 안내서를 개발하였고, 게임보조기기의 설계도와 안내서를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누리집 ([http://www.nrc.go.kr/at\\_rd](http://www.nrc.go.kr/at_rd))에 무상 배포한 바 있다.
- 「같이게임, 가치게임」 프로젝트에 참석한 뇌병변장애인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고,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,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꿈도 생겼다고 말했다.
-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향후 장애인의 문화·여가 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다.
- 국립재활원 강운규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“장애인도 누구나,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민·관이 함께 협력하고, 사회 전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20325. 건강보건연구과, 2023. 03. 17.

## II

###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3월 21일(화) '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'를 실현하기 위한 「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'23~'27)」을 발표하였다.
  -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응급의료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,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, 중앙응급의료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장관)의 심의·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.
    - \* 「응급의료법」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,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,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 심의기구
  -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 '제4차 기본계획'은 지난 1월 발표된 '필수의료 지원대책'의 중증·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으로서의 의의가 있다.
-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,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(인프라) 강화,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(全)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.
- 그러나,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\*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\*\*하는 등 중증·응급 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.
  - \*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'응급실 병상 부족' 16.2%(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)
  - \*\*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'18년 5.7% → '22년 6.2%
-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'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'를 비전으로, '지역 완결적 필수·공공의료 구축'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,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.

## < 비전 및 추진 방향 >

### VISION

##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

### 목 표

####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

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 
**6.2%('22) ▶ 5.6%**  
(27년까지 약 10% 개선)

####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





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 
최종치료기관 도착률  
**49.6%('22) ▶ 60%**  
(27년까지 약 20% 개선)

####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

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 
**미실시('22) ▶ 실시**

### 중점과제

#### 4개 영역별 17개 중점과제

01	 현장·이송 단계	1-1. 알기 쉬운 응급의료 이용체계 마련 1-2. 중증도 기반 이송 인프라 확충 1-3.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 1-4. 이송 및 수용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
02	 병원 단계	2-1. 최종치료를 포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2-2. 의료기관 간 연계·협력 제도화 추진 2-3. 물적·인적 인프라 확충 2-4. 보상체계 개선 2-5.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 조성
03	 전문분야별 대응	3-1. 중증외상 분야 3-2. 심뇌혈관질환 분야 3-3. 소아응급 분야 3-4. 정신응급 분야 3-5. 재난대응 분야
04	 응급의료 기반	4-1. 지역 중심 응급의료정책기반 강화 4-2. 응급의료 정보체계 선진화 4-3. 중앙 응급의료정책 추진기반 내실화

### 1

#### 현장·이송 단계

○ 국민이 응급医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,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,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.

- 한편,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\* 절차를 마련하고 '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'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.

\* (예시) 비응급환자 응급실 접수 시 타 적정 의료기관 이용 안내 및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 절차 마련

-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, 자동심장 충격기(AED)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.
- 도서·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(닥터헬기)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, 취약지·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·운영기준을 개선한다.
-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하여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,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.
  - 더불어,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,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, ‘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’을 마련하여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.

2

병원 단계

- 그간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·인력·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,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\*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.
  - \* 응급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제공 가능 여부(책임진료기능)를 지정기준에 포함
-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.
  - 현 권역응급의료센터-지역응급의료센터-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, 각 중증-중등증-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.
  -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, 지정기준, 보상방안,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,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,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,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.
- 한편,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,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.
  -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(요일별 당번병원제\*)을 운영하고,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·회송할 수 있도록

록 지원\*\*한다.

\* (현행) 모든 병원에서 24시간·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려워,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든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 → (개선)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- 화요일 B 병원 등 요일별 당번병원을 정하여 당직근무(단, 당번이 아닌 요일에도 진료 및 당직근무는 병원 자율)

\*\*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,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 개선(의료진 간 메신저 개발, 전자의무기록·영상정보 연동 등 기능 고도화)

- 또한,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.

○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,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(중환자실, 수술실 등)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\*을 강화한다.

\*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및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

- 더불어,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△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△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△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.

○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,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·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.

○ 이외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하여 인력·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한편,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·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.

- 또한,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(매뉴얼)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.

-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,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\*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.

\* 보호자대기실,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호트격리구역 설치, 응급실 전담 의료진 감염 시 대체인력 파견 등

3

전문분야별 대응

- (중증외상 분야)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,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,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.
- (심뇌혈관 분야)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·재지정하고, 지역 내 구급대,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  - 더불어,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(가칭 전문치료팀)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.
- (소아응급 분야)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,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(현 8개소→12개소).
  - 특히, 야간·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- (정신응급 분야)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(현 8개소→14개소)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(인프라)을 강화한다.
- (재난대응 분야)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.
  -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△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,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△ 재난의료지원팀(DMAT)과 소방·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,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4

응급의료 기반

- 지역 내 구급대,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·처치부터 이송, 진료,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(全)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“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”를 도입한다.



-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.
-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,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.
-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(종합상황판)을 환자, 구급대,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에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.
  - 이와 함께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,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·점검하여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.
  - 또한, 국가응급진료정보망(NEDIS)의 개인정보 수집·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활동일지,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,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(seamless)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.
-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.
  - △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, △ 병원 간 전원 관제(管制)를 위하여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, △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(신규 재원 발굴 등)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.
-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“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”라고 강조하며,
  - “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,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의지를 밝혔다.
  - 아울러, “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”라고 전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20329. 응급의료과. 2023.03.21.

### Ⅲ

##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실시

■ 보건복지부(장관: 조규홍)는 2023년 3월 27일(월)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「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(3년, ~'25년)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-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(폭력, 망상, 배회 등)·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,
-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「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('21.1월~'22.12월)」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.

※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'22.12.22)에서 시범사업 기간 연장 결정

#### 〈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주요내용〉

△ 참여 대상기관 확대(치매전문병동 추가), △ 지급 기준 개선(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(91~120일), 퇴원 후 경로 단순화(가정, 가정외), △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(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 원, 치매전문병동 최대 45천 원)

-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'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'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하였다.

■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(3.13) 하였고,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선정(3.27)하였다.

-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.

\*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치매안심병원 7개소('21~'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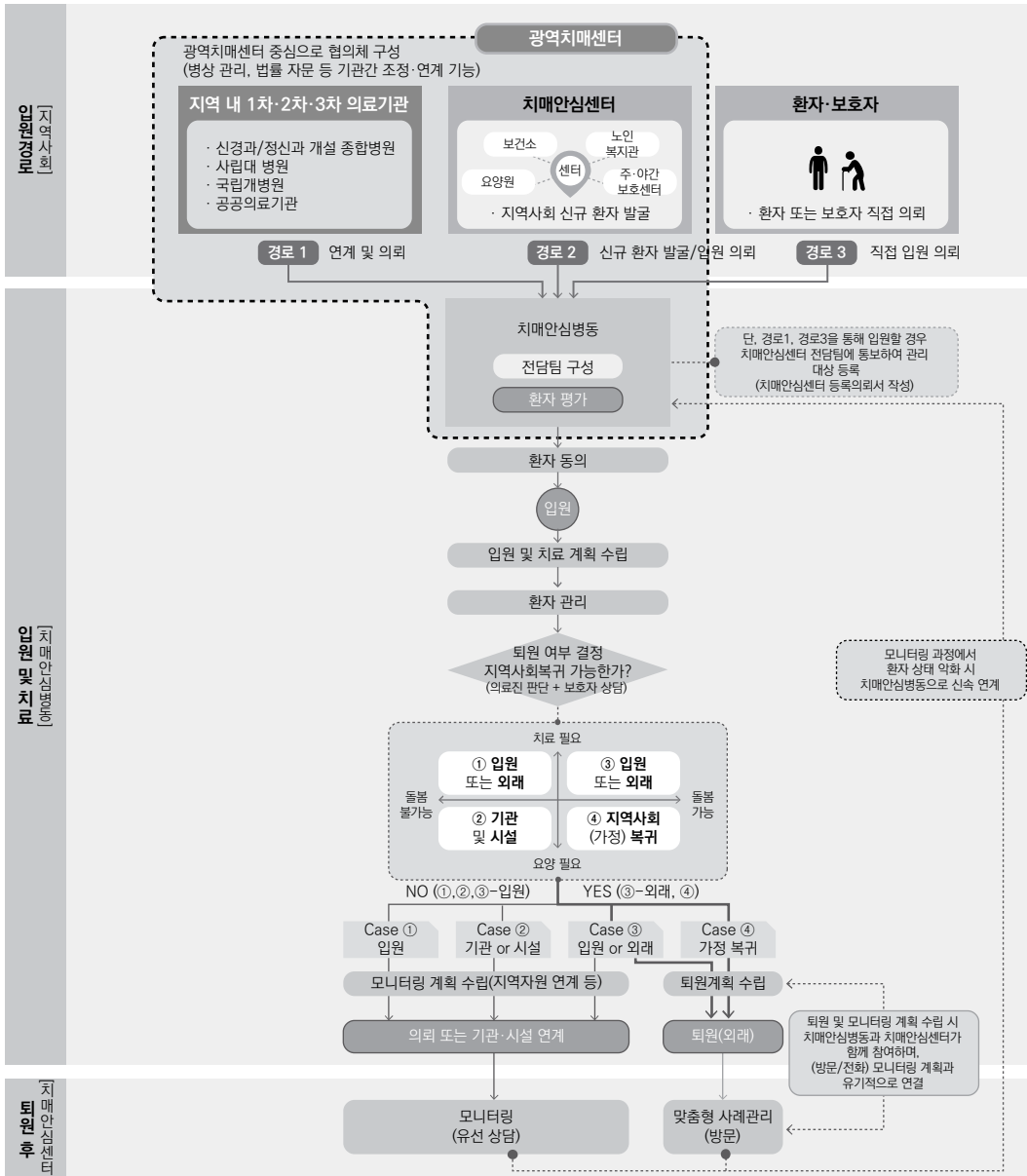
○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·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,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.

○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\*이 가능하다.

\*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로 제출

■ 보건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“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,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 시범사업 운영체계

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20348. 노인건강과. 2023.03.27.

## IV

### “결혼·출산·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”

-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 선택과 집중 -
- 저출산 정책 및 예산 평가·환류 체계 강화 -

-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위원장: 대통령)는 3월 28일(화) 오후,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  -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,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였다.
- 위원들은 ‘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,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’로,
  -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‘결혼과 출산,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’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하였다.
  -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.
-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‘윤석열 정부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’ 발표와
  - 청년과 영유아·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.
-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,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.
  - ① ‘개인의 삶의 질 향상’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‘결혼·출산·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’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,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하였다.

- ②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,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·보완할 수 있는 평가·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.
- ③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,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하기로 하였다.

■ 위원회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,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.

- ① (선택과 집중)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·효과성·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,
  - 5대 핵심 분야로 ‘돌봄과 교육, 일·육아병행, 주거, 양육비용, 건강’을 선정하였다.
- ② (사각지대·격차 해소)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.
- ③ (구조개혁과 인식제고) 문화·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, 일·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·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.
- ④ (정책 추진기반 강화)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·환류 체계를 강화한다.

■ 또한 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.

-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‘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’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며,
-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.
-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,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,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.

■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핵심 분야와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.

**〈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〉**

① **총총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**

- ① 아이돌보미서비스·시간제보육 확대 ②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③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

② **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**

- ① 일·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②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

③ **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**

- ①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②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

④ **양육비용 부담 경감**

- ① 부모급여 지급 ② 자녀장려금(CTC)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③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

⑤ **건강한 아이, 행복한 부모**

- ①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② 난임지원 확대 ③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

■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,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,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,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
○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하였다.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,

-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,

-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하며,
-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·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.

○ 또한,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■ 한편 위원회는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'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'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,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.

- ① 의료-돌봄 연계 혁신
- ②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
- ③ 고용·일자리 지원 강화
- ④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
- ⑤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

■ 금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,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·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20354. 인구정책총괄과. 2023. 03. 28.